

데스크 시각

정권 놀음에 해매는 문화전당



윤 영 기 문화미디어부장

축에 자질이 빚어진 탓도 있지만 VIP 참석 일정을 잡지 못해 미루고 미루다 잡은 날짜가 이날이다. 문화공간으로서 성수기인 행락철을 벗어나 겨울로 접어드는 날에 개관 행사를 치르게 된 이이다. 애초에 광주 시민들이 '문화 융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정부에 기대를 건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문화전당과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순진했다.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삭제 대상이라는 평범한 정치 생리를 몰랐던 것이다.

국책사업임에도 외면

정부는 시종일관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문화전당을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했다. 지난 2015년 1월 광주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대선인사를 찾았지만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문화전당을 외면했다. 정부 문화정책의 결실이자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대표하는 아이코닉에도 말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서 문화전당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매년 800억 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 하는 문화전당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비탈해서 통과

키면서..." 이 말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전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돼 정부 지원이 철실한 문화전당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낳았다. '바람보다 빨리 늙는' 정부 관료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조직 축소, 정부가 사실상 문화전당에서 손을 떼는 법안화 시도, 문화전당 운영 인력 축소 등으로 권좌에 앉은 이의 말솜씨에 화답했다. 이런 속사정 때문에 막판 먹으면 장·차관을 심을 수 있었던 최순실·차은택 라인도 무려 1년여 동안 공석이었던 문화전당 장에는 손길을 뻗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문화전당의 한 간부는 "서글픈 일이지만 '최순실·차은택'이 전당의 수장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화전당의 현실이고 본질"이라고 푸념했다. 문화전당이 정부가 챙기는 '영양가 있는' 기관이었다면 그대로 두었겠느냐는 뼈 있는 소리다.

이제라도 적극 지원해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신입 관료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다.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전당은 노무현 정부의 처치 사업으로 낙인찍혀 있다. 광주에서 시끄럽게 하면 될 사업도 안 된다." 실제 두 정권을 거치면서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과 문화전당은 수난을 거듭 겪어야 했다.

MB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는 문화전당 건립을 포함한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컨트를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없던 일로 했다. 한나라당도 국책사업인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국책사업에서 '광주 사업'으로 격하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거둬들이고 버렸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전당이 수난을 겪다 보니 노무현 정부에 새삼 고마워해야 할 정도다. 문화전당 건립을 축으로 한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예를 두어 정부의 의무적 예산 지원을 명시해 줬기 때문이다. 법적인 틀 없는 문화부의 자체 사업이었다면 문화전당은 진즉 흐지부지됐을 것이다.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문화전당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공학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광주만의 문화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할 당위와 대의명분이 뚜렷한 사업이다. 정부는 때늦었지만 진정성을 갖고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문화 융성 정책을 선의로 반겼던 광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은편칼럼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강 대 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는데 SNS와 함께 효과노릇을 하고 있다. 아마 기존 지상파 방송과 신문만 있었다면 50대 이상의 안방 민심까지도 이렇게 하기가 되기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종편방송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억지로 탄생시킨 방송이었다. 거대 보수 언론사인 동아, 조선, 중앙, 매일경제에 종합편성채널방송(종편방송)까지 허가함으로써 '친여보수신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과 '정권 재창출용'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었다. 이러한 특혜에 보답이라도 하듯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적지 않게 기여를 한 것이 이들 방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월회 보수여당의 편일 출판만 있던 종편방송이 언제부터가 변하기 시작했다. 종편방송에 변화의 바람을 넣은 이는 Jtb의 손석희 보도본부장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직접 '8시 뉴스룸'을 진행하며 종편방송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갔다. '뉴스룸'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세월호사건 때였다. 매일 현장을 연결하여 진실을 파헤치고 팩트를 검 사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일부 종편들이 완전 종립적이고 공정한 언론매체로 변화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지금도 일부 종편엔 보수논객들이 출연하여 박근혜대통령을 비호하고 여야를 양비론으로 몰타기 하는 행태를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김수환 추기경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의 실상을 일깨우는 말이었지만 최근까지도 이것이 현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200만 촛불에 불을 붙인 주역은 단연코 진실을 깨고 용기 있게 이 를 보도한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우병우 황제 사 사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치열한 기자정신이 이번 촛불의 부시들이 된 것이다. 이제 최순실게이트는 단순히 몇 사람을 처벌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서 안 된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낡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시민혁명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 역시 이변을 계기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언론본연의 위치를 확실히 되찾아야 하다는 생각이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시민과 함께 한 '1930 양림살롱'



이 한 호 주스컴퍼니 대표

날 지역 거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건 일상에서 만나는 광주의 새로운 모습과 문화를 가장 먼저 즐겨야 할 이들이 바로 마을 주민과 광주 시민이어야 한다 는 점이었다. '마을이 무대가 되는' 1930년 어느날 양림동의 살롱으로 시민들을 초대하지는 콘셉트는 그렇게 나왔다. 양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방문하는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리고 1930년 근대를 테마로 한 독특한 분위기로 예향 광주의 매력을 새롭게 소개하고 싶었다. 일상 속 근대예술 여행지로서 양림동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해 카페와 갤러리를 포함한 마을의 다양한 공간을 '살롱'으로 표현하고, 1930년대 광주의 어느 멋진 날, 다양한 공연과 즐거운 이야기, 커피 한잔을 부담없이 즐기는 콘셉트로 기획했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지만, 사실 이번 기획은 주스컴퍼니와 '광주 1930'이 2012년부터 양림동에서 광주의 1930년대와 근대 문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동안 '다충다방' 운영과 '1930 스토리클럽', '정촌달빛투어', 장소

특정형 공연 '모던걸 다이어리' 등 다양한 연구와 기획을 해오면서 구상했던 프로그램들이 올해 양림살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시민들을 만난 셈이다. 특히 전문 공연장이나 시설이 아닌 마을 속 일상 공간과 시설들을 연계·활용해 마을 공간을 무대로 만들고 마을 구석 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구조로 기획했다. 방문 및 관광에서 나아가 삶의 공간으로서 마을의 매력을 주민과 방문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최와 방문객, 공연 소음 문제 등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권하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양림동 주민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행사 리플렛을 배포하고, 양림동 주민자치센터·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갔다.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평균 500여명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에는 외국인 110명을 비롯해 1000여명 이상이 양림동을 찾았다. 큰 축제들과 비교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현재 마을 주민들의 편의와 참여 가능한 살롱 공간들의 규모를 감안해 내년에도 평균 1000명 내외의 방문객을

목표로 구상하고 있다. '지속성'은 양림살롱 초기부터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다. 텃밭과 음료 교환쿠폰을 유료 판매해 방문객들이 '돈을 내고 즐기는' 문화 향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유 지원금이 없어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큰 동력은 참여 카페들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 동참이었다. 또 음악, 미술, 공예 상품 부문에서 지역 청년 작가들이 참여해 1930년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함께 구상하고, 협력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1930 양림살롱'은 육심 많은 행사다. 문화적 측면에서 광주 근대 문화를 지속 발굴 확산하고,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는 골목 상권과 오래된 골목길을 새롭게 부각시키려했다. 관광측면에서는 당일 행사로 끝나지 않고, 방문객들이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흔적과 분위기를 마을 곳곳에 남길 수 있도록 고민했다. 내년에도 마을이 무대가 되는 '1930 양림살롱'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될 생각이다. 꽃피는 봄이 되면 시민 모두 양림동으로 놀러 오시라.

社 說

촛불을 햇불로 만드는 대통령의 3차 담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가 다시 한 번 민심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서 즉각적인 하야나 퇴진 결단보다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기면서 촛불 민심의 분노를 비껴가고 탄핵의 칼날을 피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승부수도 아닌 정치적 꼼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차 담화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없이 많은 국정 농단의 사례들을 감안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큰 잘못'으로 국한시켰다. '이게 나라냐'며 매주 주말 거리로 나서고 있는 촛불 민심의 분노와는 달리 모든 잘못은 최순실에 있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했는데도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임기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탄핵 등을 통한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정도면 민심이 승복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민심의 분열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뜻도 담긴 듯하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원내 진영에서는 "사실상 퇴진 선언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탄핵은 말도 안 된다"는 속내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담화와 집권 여당의 움직임은 촛불 민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 집회에는 촛불이 아닌 햇불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국 혼란해도 지역 예산은 확실히 챙겨야

내년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혼란 정국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2일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7000억 원이다. 현재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중역 심사에 이어 예정위 중역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건의액 403억 원) 등 현안에 대한 국비가 정부 반영안에서 누락되거나 대거 삭감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전남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있다.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적 처리 시한이 불

과 사를 앞두고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역 출신 의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탄핵 정국 때문에 시·도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 현안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앞서 지자체 예산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역 정치권의 협조 없이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시·도와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가동,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최근 2주일 사이 세계적인 지도자 두 명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장 통치자라는 기록과 잇달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5일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959년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2008년 건강을 이유로 은퇴할 때까지 반세기 동안 쿠바를 이끌 어 왕을 제외한 최장 기록 통치자 기록을 세웠다. 지난 13일 타계한 푸미폰 아

에서도 정치권과 군부 간 중재자를 자처하며 안정적으로 이끌어 '태국의 아버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6년과 2014년 쿠데타 당시 군부의 인권 탄압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분명한 명암 때문에 잇달린 평가가 있던 하지만 국민들의 추모 열기는 대단하다. 쿠바는 다음달 4일 카스트로의 장례식 날까지 9일장을 국장으로 세웠다. 지난 13일 타계한 푸미폰 아

추모와 항쟁

업이나 야구 관람 등 모든 공개적 활동을 중단했다. 태국은 에도 기간을 1년으로 선포

하고 내년 10월에 치를 장례식에 맞춰 50m의 목조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다. 서거 2주일이 지난 지금도 분향을 하러고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방콕에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광화문과 금남로 등지에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노로 체제와 전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반대 세력에 대한 폭압과 사회적 다양성 미비 등 민주주의에는 취약했다. 푸미폰 국왕은 재임 기간 중 19회의 쿠데타와 17회의 개헌이라는 혼란 속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번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편집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 회 부 220-064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52	220-0515 문화사업국 (FAX 222-8005) 227-9600 독자서비스국 (FAX 227-9500) 220-0536 서 울 지 사 (FAX 02-773-9331)	220-0541 (FAX 222-0195) 220-0551 (FAX 222-0195)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